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3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5절 양면 오프셋 인쇄기기 수입돼야

인쇄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5절 양면 오프셋 인쇄기 수입 금지를 풀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1993년 12월 10일자 인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쇄연합회는 동년 12월 2일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 의해 수입 금지된 소형 5절 오프셋 인쇄기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오프셋 인쇄기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소형 5절 양면 오프셋 인쇄기를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값비싼 4 절기 인쇄기를 대체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인쇄업계가 시설자금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실제로 단면기와 양면기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8시간 작업의 경우 단면기는 8만통을 인쇄할 수 있는 반면에 양면기는 같은 시간에 16만통을 인쇄할 수 있어 생산능력면에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같은 물량을 인쇄할 경우에도 양면기 1대를 사용할 때 단면기는 2대, 공장 설치면적도 2배이상 소요되며 기능공도 두 배가 필요해 중소인쇄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단면 5절 인쇄기계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양면인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형 5절 오프셋 인쇄기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시켜 영세한 중소인쇄업체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문제가 되었던 수입다변화정책은 1991년부터 국산인쇄기계 개발을 돋기 위해 실시됐던 것으로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크기(종이규격 540×390mm)만으로 묶어 놓아 업계에서 꾸준히 재조정을 요구했었다.

● 물가조사단체, 인쇄물 가격 산출 ‘제각각’

정부기관의 인하를 받은 일부 물가조사단체들이 적정한 기준 없이 인쇄물 가격을 산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1975년 3월 15일자 인쇄시보에 따르면 전북의 H연구소는 인쇄물 발주처로부터 인쇄요금의 조정의뢰를 받고 인쇄전문가가 한 사람도 참여치 않은 상황에서 적정선 이하로 인쇄요금을 산정, 인쇄업자들이 많은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보는 대구지역에서도 6개의 물가조사단체가 난립하여 제멋대로 가격을 사정하기 때문에 관수용 인쇄물 조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기는 인쇄사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물가조사단체들 또한 마찬가지. 시보는 문제가 되었던 일부 물가조사단체들은 가격 산정 과정에서 업자들과의 잡음을 일으켜 이들 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제도화가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관수용 인쇄물의 입찰시 용지 가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발표되는 사례가 많아 이 또한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희귀인쇄기 보존 적극 나서야

1993년 12월 10일자 인쇄신문에는 인쇄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 할만한 기고가 하나 실렸다. 이규환 계림인쇄사 대표의 글이 바로 그것.

이 대표는 “고인쇄기도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희귀 장비들을 발굴해 보존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우리



의 선조 인쇄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돼 있어 인쇄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면서 “우리 인쇄인들은 선조들이 만든 책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인쇄 기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성순보는 전해오고 있어도 그 신문을 인쇄한 인쇄기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서 한 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들여도 결코 쉽지 않음을 생각한다면 고인쇄기 또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이와 같은 고인쇄기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디엔가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이 대표는 “일부 고인쇄기들이 세종대왕 기념관 등에 보관돼 있으나 이것은 불과 몇 점에 불과한 실정이며, 남의 손에 들어가거나 소멸된 뒤에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미 때늦은 일일 수밖에 없다”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 어느 곳엔가 방치되어 있는 고인쇄기를 찾아내 찬란했던 인쇄문화를 보존하는데 우리 인쇄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자”고 주장했다.

● 인쇄기술인력 양성이 최우선과제

인쇄 단체가 중심이 된 인력 양성소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쇄인들이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1년 3월 1일자 인쇄신문은 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양성소 건립 추진으로 다소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며 단체 뿐만 아니라 인쇄사 대표, 현장책임자 및 근로자 등 모든 인쇄인들이 참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인쇄업계에서 부족한 기술인력은 대략 2천5

백여명 선. 1990년 서울인쇄조합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합원 사의 부족한 기술인력은업체당 4명꼴로 1.35대 정도의 인쇄기가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전체 8백~1천여대의 인쇄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쇄기능인력 부족 현상은 언론활성화조치 이후 각종 일간지, 주간신문 등의 잇따른 창간 및 복간, 증면 등으로 인력 스카우트 바람이 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1990년 4월부터 전면 개방된 중고인쇄기 도입조치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젊은이들의 제조업 기피현상과 맞물려 인쇄 기능인력 부족 현상은 몇몇 인쇄인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쇄신문은 한꺼번에 집중된 인쇄물 때문에 북새통을 이루고, 인쇄사의 보유 인쇄기가 총동원되어 가동되더라도 아쉬운 것이 연말 성수기의 인쇄사 상황인데도 전년도 연말 인현동을 비롯한 인쇄사 밀집 지역에서 서 있는 인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며, 서울인쇄조합에서 추진중인 인정직업훈련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쇄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기존 공업대, 전문대, 공고, 직업훈련원 등과 함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술인력수급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쇄신문은 마지막으로 인쇄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업계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젊은이들이 스스로 인쇄업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경영자는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 근로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